

##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문집 30년만에 다시 부르는 노래 (유신독재를 넘어 민주로)

- 엮은이 :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 펴낸이 : 이상경
- 펴낸곳 : 자인
- 발행일 : 2005년 5월 13일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 무장군인과 긴급조치7호



도천수\_ 고려대 철학과 73학번. 한국노동운동협의회 집행위원장,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사무총장, 민주개혁국민연합 사무총장, 민족통합연대 상임대표(현)

1972년 종속적이고 장기적인 권위주의체제 모델로서 유신군사독재가 수립되었다. 박정희 군사독재는 유신체제 수립 이후 크고 작은 반유신민주화 투쟁을 탄압하기 위하여 긴급조치1호, 긴급조치4호로 대응해 나갔지만, 반유신민주화투쟁은 수그러들기는 커녕 1975년에 이르러 오히려 대학가 중심으로 확산되는 추세를 보였다.

1975년 봄 유신독재타도, 민주주의쟁취를 외치며 분연히 떨쳐 일어났던 고려대학교의 격렬한 시위에 놀란 유신독재정권은 1975년 4월8일 헌법53조에 의거하여 대통령 긴급조치권을 발동하고 고려대학교에 휴교를 명하는 한편, 일체의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긴급조치7호를 선포하였다. 그리고 국방부장관은 긴급조치7호에 의거 고려대 질서유지에 군대동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날 오후 5시10분 전격적으로 무장군인을 진주시켰다.

이렇게 단지 한 대학교의 시위를 진압하기 위하여 완전무장한 군인의 군화발로 신성한 학원을 짓밟은 사례는 아마도 세계역사상 전후무후한 일일 것이다. 유신독재는 “최근 인도지나의 정세는 우리나라 안보와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 것으로 우리에게 안보상 위태로운 상황을 조성하는데, 대학의 학생들이 학원질서와 사회질서를 파괴하여 국가안보의 위협을 초래

하였다”며 자신의 탄압조치를 정당화하였다.

그러나 이는 인도지나에서 조성된 안보상황을 역이용하여 북한의 남침위협을 들먹이면서 국민을 혹세무민하여 장기독재를 합리화하기 위한 기만행위일 뿐이다.

그런데 무장군인이 안암캠퍼스를 유린한 것은 긴급조치7호가 처음이 아니었다. 고대는 1971년 군사독재반대 민주화투쟁에서 군부의 부정부패의 척결을 요구하고, 더 나아가 전태일 열사 분신과 광주단지사건 등 민중문제까지 투쟁영역을 넓혀나가기 시작했다. 이에 두려움을 느낀 군부가 1971년 10월5일 수도경비사령부 휘하의 무장군인을 난입시켜, 철야농성 중인 학생들을 연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어서 1971년 10월15일 위수령 발동과 함께 탱크를 앞세워 캠퍼스를 유린하였다. 군부와의 악연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1980년 5월 서울의 봄 투쟁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발효된 계엄포고령 당시 고대에 무장군인이 진입한 사건까지 합하면, 약 10여 년 동안 고대캠퍼스는 무려 세 번씩이나 군화발에 짓밟히는 씻을 수 없는 아픔을 겪게 되었다.

이와 같이 고대학생운동이 군사독재의 무자비한 탄압을 연속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면면히 살아남으면서 맹위를 떨칠 수 있었던 배경의 한편에는 데모왕국이라는 뿌리깊은 고대의 학풍이 자리잡고 있었다. 이런 학풍의 영향을 받아 고려대에는 자연스럽게 데모꾼들이 끊임없이 몰려들게 되었다. 1975년 긴급조치7호사태의 관련자인 도천수(용산고 졸), 설훈(마산고 졸), 최규엽(전주고 졸), 박강수(광주일고 졸) 등은 모두 고등학교 시절에 학생회장을 역임했거나 이미 학생운동을 경험한 사람들이었다. 심지어 당시 주동자 중에서 박강수(고대75학번, 나라감정평가원), 김기원(고대75학번, 서울장신대교수) 등은 당시 1학년으로 대학교에 들어온지 불과 한달도 안된 상황에서 시위에 뛰어든 투사들이었다.

또 다른 한편 외형적으로는 혹독한 탄압으로 운동역량이 초토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적으로는 비공개 형태로 운동역량이 계승되었기 때문이다. 71년 위수령당시 민주화투쟁을 선도했던 이념서클 중에서 한백은 민주화운동영역을 통일문제, 민중문제로 확장시켰다.

한백 출신들이 관계된 1973년 발생한 ‘민우지’ 사건은 반유신간첩단사건으로 조작되어 혹독한 고문을 받으면서, 당시로는 드물게 장기간의 옥고를 겪게 되었다. 사형선고를 받은 민청학련사건은 1년이 안 되어 석방이 되었지만, 민우지 사건의 주동자인 함상근(고대68학번)

은 무려 5년의 징역형을 받고 만기로 출소하였다. 출소한 이후에 바로 노동현장에 뛰어들어 노동운동을 하게 된다. 김영근(고대68학번, 노동운동), 양재덕(고대68학번, 인천실업극복운동본부), 박세희(고대70학번, 사업) 등도 노동현장에서 장기간 노동운동을 계속하였다.

또한 유영래(고대67학번, 전 민주화기념사업회), 박세희 등은 엄혹한 시절이었음에 불구하고, 눈에 띄지 않게 후배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이 무렵의 고대학생운동은 그 역할과 의의 면에서 한국의 학생운동사에 객관적으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고려대에서 1973년부터 시작된 반유신민주화투쟁이 활발하게 전개된 것은 직접적으로는 1973년에 이른바 '민우지' '야생화지' 등 두개의 공안조작사건으로 많은 선배학우들이 무더기로 구속을 당하였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유신반대, 학원민주화, 구속학생석방 등의 구호가 등장하게 되었다.

1974년 민청학련 사건 이후 1974년 말에 동아일보 광고탄압이 발생하자 언론자유화라는 구호까지 추가되기에 이른다.

위수령 당시 학생운동을 주도해 왔던 한사, 한백 등이 '야생화지' 민우지 사건으로 무너져 버리자, 새로이 청년문제연구회(약칭 청년), 민족이념연구회(약칭 민연), 도산연구회(약칭 아카) 등의 이념서클이 그 공백을 메우게 된다.

청년 멤버로는 조용상(고대66학번, 경향신문사 사장), 함호철(고대68학번, 성호산업 사장), 이문수(고대67학번, 현대자동차 부사장), 조성우(고대68학번, 민화협 상임의장), 이병석(고대72학번, 한나라당 의원), 설 훈(고대74학번, 전 민주당 의원) 등이 있으며, 민연 멤버로는 손태인(작고, 전 국회의원), 한정남(고대68학번, 푸른사회연대 대표), 박계동(고대72학번, 한나라당 의원), 최규엽(고대74학번,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문학진(고대74학번, 열린우리당 의원) 등이 있고, 아카멤버로는 도천수(고대73학번, 민족통합연대 대표), 김태일(고대74학번, 영남대 교수) 등이 있다.

이런 이념서클들은 당시 학생회관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상호교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고대앞 막걸리파티에서 시작된 모임은 이문수 선배집 인근의 신촌으로 이어지고, 함호철의 선배집 능곡으로까지 수없이 이어지면서 각 서클을 초월한 학생운동조직으로 발전

하게 된다.

이렇게 하여 1974년 봄 조성우, 함호철, 심재훈, 도천수, 설 훈, 홍의락 등은 인천의 영종도에 가서 비밀결사를 하였다. 한사람의 러닝셔츠를 벗어 참가자 모두 혈서로 '민혼(民魂)'이라는 글자를 쓰면서, 반유신민주화투쟁의 전위가 될 것을 맹세하였다. 이 조직은 당시 공개적인 이념서클의 배후에 비공개 배후조직으로 역할을 하게 된다.

1975년 3월초 무렵 각 대학의 반유신민주화투쟁의 수위는 유신반대시국선언문을 발표하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었다. 고대도 예외가 아니었다. 3월 26일 고대학생회는 "우리는 신학기 개강 이후 면학분위기 조성에 진력해왔으며, 야기되고 있는 제 사태에 대하여 당국의 진지하고 성의있는 태도를 주시해 왔으나 당국은 계속 우리로 하여금 실망과 분노를 느끼게 할 뿐이다"며 성의있는 태도를 촉구하였다.

그러나 이런 미온적 고대총학생회의 투쟁에 실망한 나머지, 본격적인 반유신민주화투쟁을 위한 시위계획이 준비되었다. 박구진(고대73학번, 변호사), 권순성(고대73학번, 범양전용선), 설 훈(고대74학번), 최규엽(고대74학번), 문학진(고대74학번), 신계륜(고대74학번,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신태식(교육74학번, 사업), 김관회(고대74학번, 작고), 김세웅(고대74학번, 천안시민연대), 박강수(고대75학번, 나라감정평가) 등이 모였다.

반유신투쟁의 연속성을 위하여 시위지도부를 1진, 2진, 3진으로 나누고, 조직동원은 박구진, 권순성, 설 훈, 최규엽 등, 선언문 작성은 신계륜, 시위대선봉은 김관회, 플래카드제작은 김세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975년 3월 31일 10시 대강당에서 1천5백명의 학생들이 모여 비상총학생회(회장:도천수)를 구성하고, 반독재구국선언문과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학생들은 '반독재구국선언문'에서 "4·18의거의 송고하고 장엄한 합성을 가슴 뜨겁게 새기며, 유신의 조용한 종지부를 찍을 것을 요구하며, 전국민의 냉기심을 대변코저 한다. 학생들은 민족의 위대한 전도의 도도한 흐름을 위해 이제 전 대학인과 국민들의 뜨거운 합성을 앞으로 들으며 유신체제는 스스로 퇴진의 시기를 감지하라"고 요구하였다.

결의문에서는 1.유신헌법을 철폐하라 2.고문정치 원흉을 즉각 처단하라 3.무지바한 학원 및 언론의 탄압을 중지하라 4.세칭 야생화 민우지 관계 고대인을 즉각 사면하라는 내용을 채

택하였다.

이어서 자유성도를 마친 학생들은 교가제창 및 구호를 외치면서 스크럼을 짜고 ‘유신정권 퇴진’ ‘구속학생석방’ 등의 플래카드를 들고 교문앞 까지 진출하여, 기동경찰의 페퍼포그와 최루탄에 맞서 4차에 걸쳐서 격렬한 시위를 전개하였다.

시위를 마치고 2백여의 학생들은 6시까지 농성에 돌입하였다. 한편 문교부는 31일 본교시위에 대해 ‘학원질서확립과 지도철저’라는 제하의 경고공문을 보냈다. 그리고 당일 1진으로 시위를 주도한 도천수, 설 훈, 김길중 등이 성북경찰서에 연행되고 만다.

이후 그동안 미온적이었던 총학생회가 4월7일 시위를 계획하자, 이 정보를 사전에 파악한 성북경찰서는 유기남(고대72학번, 사업), 김성근(고대73학번, 사업) 등 총학생회 임원들과 최규업, 문학진 등 민연출신 회원들을 연행하여 억류해 버렸다.

이에 따라 2차 비상총학생회(회장:권순성)를 구성하고, 본교생 2천여명이 오후 5시 대강당에 집결하여 유신반대투쟁에 돌입하게 된다.

학생들은 석탑선언문에서 “오늘의 고난은 내일을 위해 준비된 십자가가 아니냐. 우리는 말함으로서 진리를 찾아내고 행동함으로써 자유를 수호하며 믿음으로 정의를 구현하자”고 외쳤으며, 석탑자율화선언문에서 “대학의 본령은 진리의 발견과 수호에 있다. 자유, 정의, 진리의 길을 가로막는 어떤 불의와도 영원히 투쟁할 것이다”라고 선언하였다.

오후 5시40분 스크럼을 짜고 구호를 외치면서 ‘민주헌정회복’이라고 쓴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교문 앞으로 진출했지만, 기동경찰 3백여명의 페퍼포그에 의해 후퇴한 다음, 6시20분 이공대쪽 후문으로 진출했으나 저지당했다.

몇차례의 투석전을 벌이면서 오후 9시경 5백여명은 중앙도서관에서 유신반대민주화투쟁으로서는 처음으로 철야농성에 돌입하게 된다. 당시에는 막강한 투쟁력을 자랑하는 고려대 뿐만 아니라, 어느 대학에서도 철야농성을 성공시키지 못했다. 경찰의 무력진압은 물론이고, 정보기관의 학원사찰과 공작이 너무 심했기 때문이다.

최봉영(고대73학번, 인쇄업), 박구진(고대73학번, 변호사) 등의 주도로 철야농성에 성공한 500여명의 학생시위대는 다음날 3,000여명으로 불어나면서 연이틀씩이나 경찰과 치열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에 불안감을 느낀 박정희유신독재정권은 4월 8일 오후 5시에 고려대에 긴급조치7호를 발동하고 휴교령을 내리는 한편 무장군인을 주둔시켜 학내시위를 원천봉쇄해버렸다.

4월 10일에는 일반교수까지 출입금지시키고 관리직원만 출입이 허용된 가운데, 그동안 학생운동에 호의적인 자세를 보였던 김상협총장이 사표를 제출하게 된다.

그리고 4월 14일 시위와 관련하여 당시 총학생회장이던 이운세를 비롯하여, 설 훈, 최규업, 박구진, 도천수, 최봉영, 노현규, 김윤겸, 권순성, 김성근 등 41명이 제적당하고, 7명이 무기정학을 당하게 된다. 5월 14일에는 총학생회 등 모든 자치활동이 중지되고 도산연구회, 민족이념연구회 등 12개 이념서클의 해체가 결정되었다.

그 후 5월 13일 고대에 휴교령을 해제하는 긴급조치8호에 이어 긴급조치9호가 선포되었다. 그런데 당시 1975년 봄에는 고려대 뿐만 아니라 거의 전국적으로 반유신민주화투쟁이 전개되었다. 따라서 긴급조치7호는 표면적으로는 유신군부독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대학생들의 시위를 막기 위하여 본보기로 고려대를 표적으로 한 탄압이었지만, 본질적으로는 고려대 시위탄압 사건이라고 하기 보다 1975년 반유신민주화투쟁에 대한 총괄적이고 전면적인 탄압조치라고 규정해야 옳을 것이다.

실제로 당시 각 대학에서 몇십명씩 무더기로 제적을 당하게 된다. 당시 관련 대학생들은 제정원(서울대73학번, 신부), 김영철(중앙대73학번, 시인), 김삼수(서울대74학번, 서울시립대교수), 김시영(연세대73학번, 사업), 장준희(송실대73학번, 작곡) 등이다.

이들은 국군수도통합병원에서 집단으로 신체검사를 받고, 전원 강제입영되었다. 대부분 전방으로 배치되어 혹독한 군생활을 하게 되는데, 군생활과정에서 김중기(고대73학번, 사업) 등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람도 많고, 더구나 장준희(송실대73학번)는 군대에서 의문사하였으나 아직도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긴급조치7호라는 전대미문의 탄압을 받았던 고대학생운동은 역사적으로 나름대로 의 확고한 특성을 갖고 있었다.

첫째는 투쟁성이다. 4.19혁명에 앞선 4·18투쟁, 삼선개헌반대투쟁에 앞선 삼선개헌음모분쇄투쟁, 1971년 위수령사태 전에 발생한 10·5 무장군인 난입사태 등의 학생운동사가 고대학생운동의 치열한 선도성과 막강한 전투성을 이를 입증해 주고 있었다.

둘째는 연속성이다. 일련의 과정에서 고대학생운동이 군사독재의 집중적인 탄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활발하게 민주화운동을 전개할 수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않게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운동이 계승, 발전되었기 때문이다.

셋째는 과학성이다. 고대학생운동은 60년대에는 관념적이고 원론적인 민주화투쟁에 헌신했지만, 70년대 이르서는 사회과학의 연구에 토대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민주화투쟁으로 발전되었다.

이런 전통에 힘입어 당시 긴급조치7호사태에 관련된 학우들 중 상당수가 학생운동의 범주에 머무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노동운동으로 통일운동으로 민주화운동의 영역을 확장하는데 헌신하였다.

이후 긴급조치9호라는 어두운 터널을 경유하면서도 도천수, 최봉영, 최규엽, 김관희, 이상진, 금승기, 박민서, 송재석 등은 노동현장에 직접 투신하여 1987년 노동자대투쟁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노동운동을 하면서 민주노동조합의 탄생과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이어서 1990년 초부터 시작된 통일운동의 대중화에도 헌신하게 된다.

이제 긴급조치7호, 긴급조치9호시기에 조국의 민주화에 헌신했던 우리들은 새로운 시기가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를 설정하면서, 엄혹했던 70년대의 투쟁정신으로 계속해서 헌신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 감옥으로 또 감옥으로의 행진

긴조9호 시대 유신철폐 투쟁의 시작



**박석운** 서울대 법학과 73학번, 노동인권화관 소장(현), 전국민중연대 집행위원장(현),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집행위원장(현), 비정규노동자별철폐와기본권보장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 운영위원장(현)

긴급조치9호 시대는 5·22 데모로 시작되었다. 1975년 5월13일 독재자 박정희는 긴급조치 제9호(국가안전과 공공질서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를 발령하였다. 긴급조치9호는 개헌청원운동 등 헌법개정 관련 논의를 금지시키고, 학생의 집회 시위를 금지시키는 한편, 유언비어의 날조, 유포도 금지시키고 또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시키는 것도 금지시키는 내용이었다. 또 이러한 긴급조치에 대해 비방하는 것도 금지시키고 심지어 이러한 긴급조치 위반 내용을 전파하거나 보도하는 것조차 금지시켰다. 이를 위반하면 영장없이 체포, 구금한 후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1년 이상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실로 긴급조치9호는 대통령이 일상적으로 국민주권을 유린하고 헌법 위에 군림하게 하여, 1인 영구집권을 구조화시킨 유신독재체제의 완결판이라 할 수 있었다. 국가비상사태에 한해 내리도록 되어 있는, 헌법정지와 마찬가지로 비상조치를 일상시기에 일상적 법체계 속에 작동하도록 제도화시킨 긴조9호는 실제 박정희 사망시까지 약 4년 7개월 간 지속되었다. 만일 독재자 박정희가 심복에게 암살당하지 않고 계속 집권했다면 아마도 한참 동안 더 지속되었을 것이다.